종군위안부 강제동원 발뺌

"입증할 정부자료 없다" 주장

조사작업

992. 07. 03

리 보도

특파원】 일본 정
결과를 발표할 종
조사작업에서는
안부의 강제 동원
입증하는 정부자
않았다고 〈요미우
보도했다.
부의 조사에서 △
모집이나 위안소
군이 직접 관여했
출신지가 한국,
대만 등에 이르고
러났으나, 한국인
증언처럼 일본군에
안부가 된 사례가
증명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 일본 정부 소식통의 말을 빌려 조사결과 발표가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세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기억해 반성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日, 挺身隊 「위안소 경영」 직접관여 인정

"보상엔 불응" 입장고수

요미우리신문, 보도

【東京=文昌奎특파원】일본 정부는 오는6일 종군위안부(여자정신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측에 자료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카야마 (中山) 경비대가 작성한 「군인구락부 이용유죄 이란 자료에 의하면 『부대副官은 군인구락부란 위안소의 업부를 통괄하고 지도·감독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돼있다.

한편 일본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가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는 종전의 일본정부 자세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않을것』이라면서 『사실을 기억에 머물게 해 반성한다는 것』이 발표의 의미라고 말했다.

돈으로 때우려는 「挺身隊 보상」

金 鎭 國 <통일부 기자>

韓日간 양대 현안중 무역不調문제는 1일 「행동계획」이 발표됨으로써 나머지 日帝下의 韓國人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것도 6월이란 시한에 밀려 조만간 양국의 조사 결과와 함께 그에 대한 대책도 발표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日本정부가 보인 태도를 보면 근본적인 과오의 인정이나 진상 규명보다는 사죄의 크기를 돈의 액수로 산정하는 씨름을 벌이자고 나서지 않을까 염려된다.

『종군위안부는 민간인들이 한 것』『65년에 법적으로 끝난 문제』『법적으로 끝난 문제지만 해결책을 찾아보자』는등 日本정부의 뉘우침없는 태도는 앞으로 진행될 경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65년의 韓日회담이 과거사에 대한 정리없이 日本 군국주의의 침략과 탄압에 늘린 朝鮮人의 고통을 값으로 매겨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바탕에 두고 두고 피해의 재상이 됐다. 이 때문에 우

고치기 위해 수없이 노력해야 했다.

그런데 日本人들은 오히려 『65년 한일회담으로 끝났는데도 한국인은 끝없이 과거사만 들먹여 상대하기 지겹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日本의 이런 태도는 경제원조를 갈망하는 北韓이나 中國의 최근 태도에 더욱 고무되고 있는듯 하다. 과거사를 「돈」으로 덮어 버릴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韓國人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당장 성격에 관계없이 돈을 받으면 또 다시 日本을 오만과 착각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정부 문서보관소에서 정부의 관련사실을 밝히는 문서가 「발견」되는등 필요에따라 정보의 공개를 조절하는 日本측의 자세로는 단기간에 진상을 밝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년이 아니라 5년, 10년이 걸려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몇푼의 돈으로 과거의 진실을 팔아버리는 뻔한 한번의 실수로 족하다.

성급한 「문제 해결」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韓國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든가하고 정신대문